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 '3대 제일주의'에서 '과학 기술 중시'로*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정치학)

1. 서론

1998년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완료 이후 북한의 상황은 과거와 달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북한의 경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고,¹⁾ 최고인민회의의 정례적 개최와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²⁾의 강조 등으로 정치 체제 역시 정상을 되찾고 있으

* 이 글은 2000년도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 회의에서 논평을 해주신 남궁영 교수님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께 감사드린다.

- 1) 한국은행, 『1999 북한 GDP 추정결과』 참조.
- 2)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그 위상이 강화된 내각에 경제 사업을 전담케 하는 것을 일컫는다. 내각 책임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영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3호(1999), 11쪽 참조.

며, 대외 관계 개선에서도 구사회주의권, 서방, 제3세계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이른바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시대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한 남북 화해의 실현일 것이다.

이처럼 김정일 체제의 성립과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김일성 시대와 다른 김정일 시대의 특징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김일성 시대와 구별되는 김정일 체제의 향후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원리가 바로 발전 전략, 특히 경제 발전 전략의 형성 및 변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과거 북한의 역사에서 잘 보고 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3) 북한 체제의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른바 ‘발전 전략적 접근’은 현재 북한의 체제 특성을 발전 전략의 내용에서 구하고 아울러 향후 체제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도 발전 전략의 변화와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발전 전략의 채택과 실천 과정이 곧 북한 사회주의의 체제 특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고 마찬가지로 발전 전략의 변화와 수정의 모색 과정이 곧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과정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북한의 ‘특수성’은 북한식 발전 전략에서 배태된 특성이다.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이 그들의 발전 전략을 산출해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전 전략의 형성과 변화 과정이 북한 사회주의의 특성과 변화를 결과해 내는 것이다. 이 같은 발전 전략적 접근법은 제3세계 혹은 저발전 국가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모색되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 전략의 관점에서는 사회주의적 경로 역시 이념적 지향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신속한 근대화를 위한 발전 전략으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발전 전략적 접근의 자세한 논의는 김근식,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 : 발전전략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21권 1호(1999) 참고. 물론 북한 발전 전략의 변화는 곧바로 정책 결정자의 주관적 의지와 필요에 의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발전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구조화된 기존의 발전 전략이 체제의 제도적 힘으로 고착화되어 새로운 변화를 장애하고 제한하는 이른바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서 기존 발전 전략의 고수 유지 경향과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의 수정 경향이 팽팽하게 길항력을 가지는

아직 김정일 시대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김정일 시대의 발전 전략, 특히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 그 내용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정일 시대의 본격화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 완성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과 국방위원장 재취임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김정일 시대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김일성 생전의 시기부터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전제로 필자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1990년대 초반으로 잡고자 한다. 물론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과 공식적 활동은 1974년 당 정치위원 선출과 1980년 당 6차 대회에서의 공식화 작업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단 비서국 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원 등 당의 직함을 통해서였고 수령 김일성의 보좌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후계 체제의 구축 과정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후계 체제 공고화 단계로 진입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김정일의 공식 지위가 당직에만 한정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까지 겸직하면서 그의 활동 범위를 직접적인 국가 행정 분야와 군사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분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물론 김정일은 1980년대에도 후계자로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직책은 유지하고 있었으나⁴⁾ 그 외의 공식적인 국가기관 직책은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김정일로의 후계 공고화는 바로 국가 기관에서 그의 지위가 공식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는 주석과 부주석 선거에 이어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방위원회 선거를 상부 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보다 먼저 실시하였다. 국방위원회의 지위 격상과 확대 개편을 통해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외에 김정일이 맡은 최초의 국가 직책이었다. 군사 부분에 대한 김정일의 공식적 장악은 이어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어 명실상부한 군권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가시화되었다.⁵⁾ 후속 조치로 1992년 4월에는 김일성에게 대원수가, 김정일에게는 원수 칭호가 부여되었다.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동지’와 ‘원수님’으로 함께 호칭되기 시작했다.⁶⁾

- 4) 김정일이 최초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때는 1982년 제7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였는데 황해북도 송림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이어 1986년 8기 선거 때는 함경북도 함흥시 용성 선거구에서 당선됐고, 1990년 4월의 9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에서는 575호 함경북도 무산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최근 김정일로의 후계 승계를 완료한 10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1998. 7)에서는 666호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 5) 이 회의에서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와 함께 남북한 기본 합의서 채택, 나진선봉 개방 등이 결정됨으로써 혹자는 김정일과 개방파 간의 종적 정책 연합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하고 김정일 시대의 본격화를 설명하기도 한다. 오병훈,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위기상황에서 정책변화의 역동성”(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6) 이 같은 1990년대 후계 체제 공고화 과정은 실제 김일성에 의해서도 재차 확인되는 바, 1992년 4월 15일 자신의 생일 경축 연회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김정일 동지의 두리(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튼튼한 주체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이것이 나의

결국 1992년 4월 북한은 공고화된 후계 체제의 법적 완료로서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고,⁷⁾ 여기에서 과거의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곧 이어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국가 기관 서열상으로도 2위인 국방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의 본격 개막이 시작된 것이다.⁸⁾ 이제 후계자 김정일은 본격적으로 북한의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 등 각 분야에 자기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것이다.

3. ‘3대 제일주의’와 ‘혁명적 경제 전략’

1950년대의 경제 건설 과정에서 채택된 북한의 종합적 경제 발전 전략은 이른바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이었고 이것은 이후 북한의 공고한 ‘체제 원리’로 발전하였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거쳐 확립된 이른바 축적 방식에서의 중공업 우선 노선, 생산 관계

팔십 평생의 주된 총화”라고 감회어린 마음으로 슬회하기도 했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16일.

7) 개정된 헌법의 전문은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75~501쪽 참조.

8) 이 같은 명실상부한 당과 국가 기관의 실질적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장악력은 1993년 3월 남한과 미국의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준전시 상태’를 조선인민군 사령관 명의로 하달한 것이나 그해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조치를 주도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주요특징”, 『력사과학』, 1호(1995), 25쪽. 여기에는 당시의 준전시 상태 선포를 김정일이 했다는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사찰 강요에 대해 김정일이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 있다.

의 선차적 의의와 정치 사상적 자극의 우위, 그리고 철저한 내부 원천 동원을 강조하는 자력갱생의 원칙 등이 이른바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된 것이다.⁹⁾

그리고 이 경제 발전 전략은 이데올로기에서의 주체사상, 정치에서의 수령제와 함께 북한 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체제 원리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경제 정책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993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핵심 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에서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의 핵심은 줄곧 중공업 우선 노선이었다.¹⁰⁾ 그러나 1993년 12월에 개최된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는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완충기¹¹⁾ 과제로서 이른바 ‘3대 제일주의’ 즉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노선이 제기되었다.

9) 이러한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핵심은 1984년에 발간된 북한 책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이 자립경제 이론의 사상 이론적, 방법론적 기초’임을 전제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기본 로선’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은 자립경제 건설의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자력갱생은 자립경제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됨으로써 1950년대 형성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이 그대로 이론화되었다. 홍승은, 『자립경제이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4), 3~180쪽.

10) 공식적으로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이었지만 이 동시 발전 테제는 결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이 아니라 중공업의 선차성을 전제한 위에서의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 발전이었다.

11) 북한이 설명하는 완충기의 의미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내외의 정세가 변동될 수 있고 경제 부분들의 균형과 장성 속도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 발전 수행으로 넘어가는 데서 일정한 조절과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연구』, 1호(1994), 2쪽.

물론 이 회의에서는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와 함께 ‘인민 경제의 선행 부문인 석탄 공업, 전력 공업, 철도 운수 부문’에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때 천명된 새로운 경제 정책은 이후 1994년 신년사에서 이른바 ‘혁명적 경제 전략’으로 정리되면서 ‘3대 제일주의’와 ‘인민 경제 선행 부문’이 동시에 강조된다.¹²⁾ 혁명적 경제 전략이 비록 인민 경제 선행 부문의 강조를 빠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이 3대 제일주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3대 제일주의는 분명 기존의 중공업 우선 전략이 인민 생활의 향상에 문제점을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 동안 경시되었던 부분에 많은 힘을 쏟음으로써 축적보다는 인민의 소비 욕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1990년대의 북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그간 누적되었던 중공업 우선의 폐해가 인민들의 소비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그것이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체제 위기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1990년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인민들로부터 체제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무엇보다도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통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을 제대로 공급하고 또한 무역 증대를 통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

12) 혁명적 경제 전략은 이후 김일성에 의해 다시 한번 정식화되는데, 김일성은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지난해(1993년)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3년 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 경제의 선행 부문인 석탄 공업과 전력 공업, 철도 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 공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 경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4. 7. 6), 『김일성 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74쪽.

이다. 1993년의 3대 제일주의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채택된 김정일 시대의 경제 노선인 셈이다.

3대 제일주의는 지금까지 북한의 축적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고수해 오던 ‘중공업 우선’ 방침이 1990년대의 상황적 조건에 의해 즉 ‘변화된 환경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 구조를 개조하고 경제 건설에서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¹³⁾ 3대 제일주의와 함께 강조되었던 ‘선행 부문과 금속 공업의 발전 방침’도 사실은 예전의 중공업 우선 노선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석탄, 전력, 철도 운수와 금속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주의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중공업 우선의 방침이 아니며 김일성이 설명한 대로 ‘이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 경제 건설을 다그쳐갈 수 없기’¹⁴⁾ 때문이다. 결국 ‘혁명적 경제 전략’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민 경제 선행 부문과 금속 공업 부문의 발전 강조는 예전의 중공업 우선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으로서의 3대 제일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민 경제 선행 부문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는 것이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고 그것이 곧 ‘인민 생활 향상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는 근본조건’이 된다는 것이다.¹⁵⁾

북한 스스로도 3대 제일주의는 기존의 축적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혁명적 경제 전략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

13)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 방향에 대하여”(1993. 12), 『김일성 저작집』, 제44권(1996), 280쪽.

14) 위의 글, 283쪽.

15) 한대성, “인민경제선행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호(1995), 10~11쪽.

구조를 경공업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개조하며 속도와 투자에서 경공업과 농업에 큰 힘을 돌리는 인민 생활 향상의 전략'으로 규정되고 있다.¹⁶⁾ 다시 말하면 명백한 축적 방식의 변화인 것이다. 이는 '기본 건설 투자를 대담하게 줄여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고 인민 소비품 생산과 수출품 생산을 늘리는 데 돌릴 것을 기본 요구'로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재 부분의 발전 속도를 생산 수단 생산 부문보다 더 높이고 그 투자비를 상대적으로 늘려 인민 경제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¹⁷⁾

혁명적 경제 전략은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축적 펀드의 부문별 구성에서 경공업과 농업, 대외무역 부문의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¹⁸⁾ 결국 혁명적 경제 전략의 주된 특징은 '소비재 생산을 힘있게 틀어쥐고 나간다는 전략적 방침'이며 이는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경제 발전 속도와 균형을 조절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 속도를 더 높여나간다는 것'을 말한다.¹⁹⁾ 말 그대로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²⁰⁾

이를 통해 3대 제일주의는 단순한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핵심이었던 중공업 우선이 전체 경제의 균형을 왜곡

16) 위의 글, 10쪽.

17) 리준혁,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 경제적 진지의 공고화", 『경제연구』, 3호(1996), 15쪽.

18) 김상학, "우리당의 혁명적 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2호(1996), 10~11쪽.

19)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3쪽.

20) 정문산, "농업, 경공업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고리", 『근로자』, 1호(1995), 59쪽.

시켰다는 전제하에서 제시된 축적 방식의 변화이며 인민 경제 부분들 사이의 균형 보장 정책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제 정책상의 변화는 1990년대의 변화된 조건 즉 경제 위기와 사회주의 붕괴에 직면하여 북한이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3대 제일주의는 북한의 정책 방침에 반영되었고 1994년 4월에 열린 9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994년 예산 배정 중 이들 3대 부문이 평균 이상의 비율로 증가 배정 받기도 했다.²¹⁾

결국 1993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 노선은 핵심적으로 3대 제일주의로 나타났고 이는 ‘혁명적 경제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²²⁾이라는 지적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부문에 집중적인 힘을 쏟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1950년대 경제 건설 과정에서 ‘인민 생활 향상’은 매번 경공업 우선 노선의 전매 특허였고 이 주장을 편 세력들은 결국 중공업 우선 주장에 밀려 정책에서나 권력에서 배제된 것을 감안해 보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1990년대의 3대 제일주의는 분명 변화이다.²³⁾

2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7차 회의 결과분석』(통일정세분석 94-09, 1994. 4), 10~11쪽. 1994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1993년 대비 3.2% 증가였는데 농업 부문은 6%, 경공업 부문은 5.4%, 무역 부문은 4.1% 증가함으로써 평균 이상으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로동신문』 신년 공동 사설, 1995년 1월 1일.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제일주의가 북한의 총론적 경제 발전 전략인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근본 수정을 의미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여전히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틀은 견지되었고 중공업 우선 노선 역시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경공업 제일주의에 따라 소비재 생산 부문에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투자 규모에서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 몫이 작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며 3대 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도 동시에 중공업 우선의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기간에

3. 수령 사망과 체제 위기 극복 우선 : 혁명적 경제 전략의 '형식화'

김정일 시대의 경제 노선으로 3대 제일주의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1994년 수령 사망과 경제난 심화로 체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제대로 현실에 반영되기 힘들게 되었다. 즉 중공업 우선의 축적 양식을 변화시켜 보려는 3대 제일주의가 당시 경제 위기 극복과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수령 사망과 이후 진행되는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3대 제일주의는 비록 명목적으로는 계속 강조되었지만 권력 승계를 완료하기 위한 정치적 통합과 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체제통합의 우선 순위에 밀려 실질적으로는 '형식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히려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의 경제 노선은 뒷전으로 밀렸고 권력 승계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당내 갈등 및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체제 정당화 담론과 체제 안정의 강조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어김없이 '혁명적 경제 전략'이 강조되고 이른바 '3대 제일주의'가 주장되었지만 그것은 형식뿐이었고 사실 그 3년의 핵심적 과제는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언술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히려 강조점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3대 진지론'과

걸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로선'으로 여전히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창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2~5쪽 참고. 1990년대 3대 제일주의를 '중공업 위주에서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를 반석같이 다지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역시 3대 제일주의가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제약에 의해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박영근,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며 자립적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호(1996), 6쪽.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붉은기 철학’,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도 마다 앓고 견뎌내겠다는 동원 구호로서 ‘고난의 행군’이 이 시기 김정일의 최대 관심이었다.²⁴⁾

특히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붉은기 철학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치 담론은 당시의 시기가 경제보다는 정치 사상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들 정치 담론은 수령 사망 이후 위기 상황에서 당내에 일정한 갈등이 존재했고 따라서 이를 제압하는 정치적 경고라는 소극적 차원의 의미와 함께²⁵⁾ 수령의 공백이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에서 전체 인민의 일심 단결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 유지로 대중 동원을 확보해 가기 위한 적극적 차원의 의미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었다.²⁶⁾

마찬가지로 이즈음에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서의 군(軍)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이 곧 당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선군(先軍)정치’와 ‘선군 혁명영도’가 주창되었던 것 역시 체제통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김정일식의 정치 연술이었음은 당연하다. 유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김정일의 3대 제일주의는 정치적 우선 순위에 밀려 1997년까지 ‘형식화’되고 만

24) 1996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제기된 것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3대 진지로서 이른바 ‘정치 사상적 진지’, ‘군사적 진지’, ‘경제적 진지’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동 사설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 사상적 담론으로서 붉은기와 고난의 행군이 길게 거론됨으로써 이미 경제 정책에의 관심보다는 체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25) 1995년 이후 권력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근식, “북한의 권력승계과정과 당내갈등”, 『통일문제연구』, 11권 2호(1999), 64~82쪽 참조.

26) 수령 사망 이후 체제 정당화 담론으로서 붉은기 철학과 고난의 행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및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8권 2호(1999), 49~56쪽 참조.

것이였다.²⁷⁾

4. 권력 승계 이후 경제 발전 전략 : '혁명적 경제 정책'과 '과학 기술 중시 정책'

수령 사망 이후 북한은 '수령의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권력 승계가 마무리되었다. 1997년 10월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에 이어 1998년 9월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수정 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의 자리에 안치시키고 김정일이 실질적 국가 최고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재선출됨으로써 북한에서 권력 승계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는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이루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여졌던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 실제 권력 승계 과정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상대적 안정성은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최고조에 달한 위기를 극복하고 난 김정일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이른바 '사회주의 강행군'을 주창하는 한편 사회주의를 지키겠다는 소극적 의미의 '3대 진지론' 대신에 부강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론'²⁸⁾을 내놓는다.

27) 물론 수령 사망 이후 3대 제일주의가 형식화된 데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 사상적 통합을 우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정말고도 실제적인 경제 여건이 효과적인 정책적 변화를 추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28) 강성대국론에 대한 북한의 체계적 설명으로는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권력 이행기의 혼란을 막기 위한 인내와 단결로서의 정치 담론들은 이제 김정일 체제의 공식 등장과 함께 인민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바뀌어야만 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로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을 이룬 마당에 이제는 경제 강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논리로 발전한다.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이 제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 때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를 제 궤도 위에 올려세우고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²⁹⁾ 것으로서의 ‘혁명적 경제 정책’과 향후 ‘부강 조국 건설의 전략적인 로선’³⁰⁾으로서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7월 31일 조선로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구호에는 ‘당의 혁명적 경제 정책과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 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³¹⁾

1) ‘혁명적 경제 정책’: ‘3대 제일주의’의 소멸과 ‘농업’ 및 ‘동력’의 강조

1998년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은 1993년부터 내놓았던 ‘혁명적 경제 전략’의 변형으로서 이른바 ‘혁명적 경제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혁명적 경제 전략의 핵심 내용이었던 ‘3대 제일주의’는 이미 1998

1998년 9월 9일 ; “주체의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4일 등을 참조.

29) 『로동신문』 공동 사설, 2000년 1월 1일.

30)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2000년 7월 4일.

31) 『로동신문』, 2000년 8월 1일.

년부터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3대 제일주의 대신 오히려 인민 경제 선행 부문과 금속 공업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3대 제일주의 중에서는 단지 농업의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8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는 바로 전해까지 언급되었던 혁명적 경제 전략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농업과 석탄 공업, 전력 공업과 철도 운수, 금속 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³²⁾ 혁명적 경제 전략이 요구되었던 당시 상황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3대 제일주의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때부터는 혁명적 경제 전략의 내용을 농업과 선행 부문 및 금속 공업으로 축소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999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농업 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설명되고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으로서 감자 농사 혁명, 두벌 농사(이모작), 종자 혁명, 토지 정리 사업 등이 강조되었다. 이어 전력과 석탄은 ‘인민 경제의 생명선’으로 규정되고 아울러 철도 수송과 금속 공업 등의 강조가 이어졌다.³³⁾ 이 같은 혁명적 경제 전략의 내용 축소와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정은 결국 2000년 공동 사설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적 기치로서 ‘혁명적 경제 정책’으로 규정된다.³⁴⁾ 그리고 이제 ‘혁명적 경

32)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3대 제일주의에서 농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 반면 경공업 제일주의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고 무역 제일주의는 아예 생략되어 있다.

33)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 물론 여기서도 경공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34)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제 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 등장 이후 과거 '혁명적 경제 전략'을 대체하는 노선으로 자리매김된다.³⁵⁾

결국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적 기치'로 표현되는 혁명적 경제 정책은 1993년에 제시된 혁명적 경제 전략의 내용을 축소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한 것으로서 주로는 농업과 동력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3대 제일주의가 중공업 우선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투자 순위와 축적 방식의 일정한 변화였다면³⁷⁾ 혁명적 경제정책은 위기가 체제 붕괴의 임계점을 벗어나고 경제 역시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국면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농업과 동력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먹는 문제'의 해결과 생산 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확보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이 1998년 경제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를 재개한 이래

35) 리중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의 전투적 기치”, 『경제연구』, 1호(2000), 2~4쪽.

36) 과거 혁명적 경제 전략, 즉 3대 제일주의와 비교해 볼 때 혁명적 경제 정책은 축적 방식과 투자 순위에서 중공업 우선 노선과 이를 통한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의 재확인인 것으로 강조점이 이동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1998년 들어 중공업 우선 정책을 다시 강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북한의 경제 구조는 '중공업을 기둥으로 하는 자립적 경제 구조'라고 선언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모든 경제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 발양시키는 사업'인데, 이는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인 중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1998년 9월 26일. 특히 1998년 9월 17일에는 『로동신문』과 『근로자』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라는 제하의 공동 논설을 실기도 했다.

37) 3대 제일주의가 중공업 우선 정책의 포기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부문을 국가 차원의 역점 사업으로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강택,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 실리추구형 폐쇄주의와 그 딜레마”,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1999), 87쪽.

가장 많이 찾아갔던 곳은 토지 정리 사업 현장, 농장, 양어장, 목장 등 농업과 먹는 문제에 관련된 장소였다. 즉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 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적기 적작,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농업 구조를 개선하며, 또한 두벌 농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종자 혁명을 일으켜 수확고가 높고 안전한 품종을 재배 육종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기르며 풀과 고기를 바꿀 데 대한 방침에 따라 축산 기지를 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토지 정리 사업을 전 군중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³⁸⁾

이것은 농업 생산을 '인민들의 식생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며 식생활 수준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회의 기백과 활기에 기본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 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⁹⁾

또한 생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력, 운송 및 금속 부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전력 공업과 석탄 공업, 대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과 중소형 발전소 건설, 그리고 금속 공업에 대한 강조가 1998년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력 공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이라 하면서 동력 문제 해결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중공업의 한 부문인 전력 공업을 현대 산업의 기본 동력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생산과 기술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물질적 요소의 하나로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보다 투자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⁴⁰⁾

38) 리창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1호(1999), 3쪽.

39) 장병호,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 『경제연구』, 1호(1999), 13쪽.

40) 한성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4호(1998), 13쪽.

이처럼 농업과 동력에 최우선의 관심을 부여하는 혁명적 경제 정책은 실제 1999년과 2000년의 국가 예산 배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99년 총예산은 전년에 비해 2%가 증가하였는데, 농업 부문에서는 11%, 전력 공업은 15%, 석탄, 광업, 금속, 기계 등 기간 공업 및 철도 부문은 10% 증가하였다.⁴¹⁾ 그리고 2000년 총예산은 전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는데, 전력 공업은 15.4%, 석탄공업은 12.3%, 농업 부문은 5%가 증가하였다.⁴²⁾

김정일이 내놓은 혁명적 경제 정책은 내용적으로 농업과 동력에 가장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으로는 절대적 노동량의 증가에 의한 대중 동원과 이를 통한 강행적 축적 방식으로서의 양적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1998년부터 북한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강계의 혁명 정신’과 ‘제2의 천리마 대고조’⁴³⁾가 바로 이를 입증한다.⁴⁴⁾ 2000년 공동 사설에서 혁명적 경제 정책 관철의 모범으로 예시된 ‘락원의 10명 당원’ 이야기⁴⁵⁾와 최근 『민주조선』에 실린 ‘안변 청년 발

41) 『조선신보』, 1999년 4월 12일.

42) 『조선중앙통신』, 2000년 4월 4일.

43) 1998년 1월 김정일이 산간 지대인 자강도를 현지 지도한 이후 자력갱생의 모범적 전형으로 강계의 혁명 정신이 제기되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자연 재해와 불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 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정신으로 설명되는 강계정신은 ‘당의 의도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위대한 창조 정신’으로 규정된다. 또한 강계정신은 1950년대 강선 제강소의 정신이 천리마 운동의 대고조를 일으킨 것처럼 1990년대 사회주의 강행군에서 제2의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로동신문』, 1998년 2월 27일. 이후 강계의 혁명 정신, 강계정신, 제2의 천리마 대고조, 제2의 천리마 대진군 등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44) 혁명적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속도전식 대중 동원 방식인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은 1999년 3, 4분기 기간의 공업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전력은 9%, 선철은 7%, 압연강재는 40%, 공작 기계 생산은 16% 증가하였고, 각종 공장에서도 계획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태천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999년 10월 29일.

전소' 등 기념비적 창조물의 건설 일화⁴⁶⁾ 등은 바로 이 같은 대중 동원 방식의 전형이다. 먹는 문제로서의 농업 생산의 증가와 인민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선행 부문과 금속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1950년대 경제 성장 방식으로서 자력갱생과 노동력 동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 성장 방식을 답습하는 '혁명적 경제 정책'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분명 불충분한 것이었다.

2) 과학 기술 중시 정책: 김정일 시대의 중장기 추격 발전 전략

1998년 이후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 이른바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체제 안정이 가시화되고 권력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강조는 이미 눈에 띄기 시작했다. 1998년 공동 사설에서 '지식인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초병'들이라며 과학, 기술에 대한 강조와 과학 기술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전의 신년사에 비해 대폭 중시되었다.⁴⁷⁾ 이어 1999년에도 과학 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으로서 조국의 부흥 발전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설명되었다.⁴⁸⁾ 과학 기술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1999년 1월 11

45) 이들은 한국전쟁 시기 략원 기계 공장에 근무하던 당원들로서 자체의 힘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전쟁 이후 복구 시기에는 북한 최초의 대형 양수기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했다.

46) 건설 기간 동안 군인들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시멘트 혼합물을 양생시키기 위해 현장에 불통을 설치하고 담요와 이불, 솜옷을 씌워 공사를 진행시켰고 여름에는 장마로 기계가 침수되자 물이 빠지기도 전에 신고 있던 장화를 태워서 갭 안을 밝히며 공사를 계속했다. 『민주조선』, 2000년 12월 13일.

47)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일 김정일이 ‘나라의 과학 기술 발전의 중추 단위’인 과학원을 현지 지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후 북한은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였고 1999년 1월 16일 『로동신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과학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식 사회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 부흥의 새 시대를 앞당겨나가자”고 호소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은 중요하게 과학 기술적 대결이다. 과학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군사력도 강화할 수 없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 경제 대국 건설에서의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⁹⁾

또한 김정일은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과시하고자 1999년 3월 7일 시행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직접 투표했고 강성대국 건설의 추동력으로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⁵⁰⁾ 김정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북한의 국가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북한은 1999년에 ‘과학 사업비’ 지출을 전년 대비 6.3% 증대했고 2000년 ‘과학 기술 발전 사업비’ 예산 역시 전년 대비 5.4% 증액했다.⁵¹⁾

48)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

49)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16일.

50) 『조선중앙통신』, 1999년 3월 8일.

51) 『조선중앙통신』, 2000년 4월 4일. 이 외에도 북한에서는 1998년부터 과학 기술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1999년 3월에는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기간 과학 기술 발전의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향후 과업과 방도’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 대회를 즈음하여 제14차 중앙과학기술축전과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제2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시켰다. 특히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에서 당비서인 최태복은 “전자 공학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자 재료와 컴퓨터, 숫자 조종 장치, 자동화 장치, 로봇들을 연구 개발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우리 당이 밝혀준 인민 경제의 자동화, 로봇화, 컴퓨터화 방침을 관철할 수 있는 든

또한 과학 기술의 내각 전담 부처인 전자공업성이 1999년 11월에 신설되었다. 이 같은 북한의 과학 기술 중시는 두 명의 부총리 중 한 명인 조창덕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근본적 강조는 급기야 2000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기둥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기에 이른다. 2000년 공동 사설에서 과학 기술은 이제 ‘경제 건설의 모든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목표가 정치 사상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었음을 감안하면 강성대국의 3대 기둥으로서 과학 기술이 사상 및 총대와 나란히 위치지어졌다는 것은 향후 경제 노선의 핵심 방향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다시 말하면 ‘사상도 건설하고 총대가 굳건한 상황에서 이제 과학 기술만 발전시키면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최근 당 창건 55돌을 맞이하여 발표된 ‘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도 김정일의 과학 중시 사상을 언급하면서 전자 공학, 생물 공학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첨단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며 전자 자동화 공업과 컴퓨터 공업 발전에 힘을 쏟아 21세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자고 강조하였다.⁵⁴⁾ 결국 과학 기술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 열쇠의

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과학 기술 5개년 계획과 첨단 과학 기술 발전 중심 과제들을 철저히 수행하자고 언급했다.

52) “우리는 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 기술 중시 모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 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 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라고 주장해 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가 과학 기술이고 경제 발전이 곧 과학 기술 발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53)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54) 『로동신문』, 2000년 8월 1일.

하나'이며 이런 의미에서 과학 기술은 '국력과 군력'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⁵⁵⁾

그런데 북한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은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우선은 과학 기술이 '혁명적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먹는 문제 해결과 생산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경제 회복과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적 재건, 즉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것이 과학 기술 강조의 주요한 측면인 것이다. 이는 2000년에 대규모로 개최된 과학기술발표회가 대부분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던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⁵⁶⁾

그러나 북한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은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의 목표로서 이른바 '정보 통신 산업'의 집중 육성이라는 보다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혁명적 경제 정책'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한 '강계의 혁명 정신'이나 절대적 노동력의 동원을 강조하는 '제2의 천리마 대고조' 운동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유용한 방도일 수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 북한이 추구해야 할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결국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은 이 같은 단기적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전제로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토대로서 제시된 목표라 할 수 있다.

과학 기술 특히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최근 들어 두

55) 리창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1호(2000), 9쪽.

56) 지난해 개최된 주요 과학기술발표회를 보면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를 위한 1, 2차 과학기술발표회, 전국 과수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전국 감자 농사와 관련한 과학기술 발표회, 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전국 수의 축산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전국 남새 및 버섯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등이 있다.

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 정상 회담 직전 중국 방문길에 김정일이 중국 IT 산업의 상징인 ‘중관촌(中關村)’⁵⁷⁾을 방문하고 컴퓨터 제조 업체인 렌샹 그룹을 찾은 사실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⁵⁸⁾ 실제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역시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북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⁹⁾ 최근에는 남한 기업과의 경험에서도 북한이 주로 정보 통신 관련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2000년 7월 8일 북한 공식 인터넷 사이트의 영문판을 전 세계에 송출했고⁶⁰⁾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이 창설되고 따로 평양과 함흥에는 컴퓨터기술대학이 설립되었으며 각급 대학에 컴퓨터공학과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 등이 개설되기도 했다.⁶¹⁾ 이미 북한의 공식 언론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⁶²⁾ 분명 북한의 최근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과 이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⁶³⁾

5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화섭, “중국의 실리콘 벨리 : 中關村”, 『통일경제』, 8월호 (2000), 21~30쪽 참조.

58) 경험 실무 회담을 위해 남측을 방문한 북측의 민경협 회장 정운업이 관심 있게 방문했던 곳이 현대 반도체 공장이라고 추측 특사로 방문했던 김용순 비서가 포철의 자동화 공정을 관심 있게 둘러본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9) 북한의 정보 통신 현황에 대해서는 아태평화재단, 『한반도 통합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한 준비(1)』(서울 : 아태평화재단, 2000), 55~102쪽 참조.

60)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범태평양 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하는 조선 인포뱅크의 영문판 사이트(www.english.dprkorea.com)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저널』, 2000년 8월 3일, 42~50쪽 참조.

61) 『조선중앙통신』, 2000년 12월 20일.

62) 인터넷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글은 김명희, “과학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인터넷”, 『과학의 세계』, 2월호(1996) ; 한재철, “정보고속도로”, 『과학의 세계』, 2월호(1996)이다. 최근에는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에서도 인터넷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민주조선』, 2000년 1월 21일.

63) 이와 관련 혹자는 북한의 전략이 정보 통신 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하되 체제 위기

실제 1999년 1월 16일자 『로동신문』에서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과학 기술 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는 바로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부흥과 조선식 사회주의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⁶⁴⁾ 2000년 7월 4일자 『근로자』와 『로동신문』 공동 논설에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단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순차적으로 답습하기만 한다면 언제 가도 남을 따라 앞설 수 없다. 우리 당의 과학 중시 사상은 기성 관례나 기존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과학 기술 발전에서 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들이 몇백 년 동안에 한 일을 짧은 기간에 이룩하며 과학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것을 창조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설명한 대목⁶⁵⁾은 김정일 시대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 북한 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북한 사회주의의 전략적 발전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 승계 이후 북한의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는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은 단순히 효율적인 경제 정책 수행을 위한 기술 혁신 차원을 넘어 21세기 주력 분야로서 정보 통신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 정보 사회의 전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북한 역시 결국은 국제사회와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김정일 시대의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은 당연히 디지털 시대의 정보 통신 산업(IT)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경제 후진국의 ‘개구리 도약 전략 (leap-frogging strategy)’으로서 북한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은 눈여겨볼

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는 차단하는 분리 정책을 쓰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2000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통일부, 2000) 참조.

64) 『로동신문』, 1999년 1월 16일.

65)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4. 결론에 대신하여

김정일 시대의 경제 발전 전략은 아직 확실한 모습과 내용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다만 체제 위기 극복과 정치 안정 달성 이후에 공식적으로 김정일 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관계를 비롯한 대외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도 발전전략의 변화 내지는 수정이 모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경제 발전 전략뿐 아니라 주체사상으로 강고화된 이데올로기 차원과 수령제로 정착되어 있는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도 시기와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 변화의 기미가 있을 것임을 예측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김정일 시대의 경제 발전 전략 변화가 중요한 것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 발전 전략을 둘러싼 갈등과 발전이 결국 북한 체제의 특성과 원리를 형성했음을 고려해 볼 때 경제에서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사실은 정치와 이데올로기 등 체제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의 발전 전략 변화는 본격적으로 착수되지도 않았고 아직 완결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제공하는 변화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시대의 개막은 북한 발전 전략의 변화가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향후 변화 전망은 결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주장이나 북한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주관적 의지의 피력이 아니라 북한 역시 하나의 실

존하는 저개발 국가의 발전 정권(regime of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김명희, “과학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인터넷”, 『과학의 세계』, 2월호 (1996).

김상학, “우리당의 혁명적 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2호(1996).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 방향에 대하여”(1993. 12), 『김일성 저작집』, 제4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4. 7. 6), 『김일성 저작집』, 제4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창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주요특징”, 『력사과학』, 1호(1995).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연구』, 1호(1994).

리영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

- 강국 건설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3호(1999).
- 리준혁,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 경제적 진지의 공고화”, 『경제연구』, 3호(1996).
- 리중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전투적 기치”, 『경제연구』, 1호(2000).
- 리창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1호(2000).
-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1호(1999).
- 박영근,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며 자립적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호(1996).
- 장명호,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 『경제연구』, 1호(1999).
- 정문산, “농업, 경공업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고리”, 『근로자』, 1호(1995).
- 한대성, “인민경제선행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호(1995).
- 한성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4호(1998).
- 한재철, “정보고속도로로”, 『과학의 세계』, 2월호(1996).
- 홍승은, 『자립경제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4).

『근로자』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2차 자료>

-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 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8권 2호(1999).
- _____,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 발전전략적 접근”, 『한국 사회과학』, 21권 1호(1999).
- _____, “북한의 권력승계과정과 당내갈등”, 『통일문제연구』, 11권 2호 (1999).
-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2000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통일부, 2000).
- 김화섭, “중국의 실리콘 밸리: 中關村”, 『통일경제』, 8월호(2000).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 결과분석』(통일 정세분석 94-09, 1994. 4).
- 아태평화재단, 『한반도 통합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한 준비(1)』(서울: 아태평화재단, 2000).
- 오병훈,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위기상황에서 정책변화의 역동성”(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임강택,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실리추구형 폐쇄주의와 그 딜레마”,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1999).
- 한국은행, 『1999 북한 GDP 추정결과』.
- 『시사저널』
- www.english.dprkorea.com

〈Abstract〉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Kim Jong Il Regime

Kim Keun-Sik(Kim Dae-jung Peace Foundation for the Asia-Pacific Region, Political Science)

This paper is an examination of the contents and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under Kim Jong Il's leadership.

The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the "Independent National Economy"(INE). However, since Kim Jong Il's appointment a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1993, a significant change has been noted in the main principle of the INE, namely in the policy of putting priority on the heavy industry. In December 1993, at the 21st plenary session of the 6th Party Congress, there came into being the so-called "Three First Policies" - the Agriculture-First Policy, Light Industry-First Policy, and the Trade-First Policy. The new economic policies were later dealt with in the New Years Joint Editorial in 1994 as the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The intent of the new policies was to concentrate exclusively on improving the economic

welfare of the people, an area which has been more or less neglected in the past.

However, the so-called “Three First Policies” had to be suspended after Kim Il Sung’s death in 1994, and because of the subsequent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compounded by the more urgent tasks of completing the political succession of power and the integration of the governmental system. In 1998, when the Kim Jong Il power structure was officially inaugurated,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as introduced : the “Revolutionary Economic Policy” and “Policy of Giving Priority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volutionary Economic Policy” was enacted by consolidating the contents of the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of 1993 and by readjusting its investment priorities so as to solve the serious economic problems by readjusting the investment priorities towards agriculture and power supplies.

Since 1998, therefore, North Korea has placed its priority on emphasizing “Science and Technology” as the new centerpiece of Kim Jong Il’s leadership. As a result of stressing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olicy has now been elevated to one of the three main pillars of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State.”

However, although the “Revolutionary Economic Policy” may be a useful tool in solving the food shortage problem and normalizing the North Korean economy, it may fall short when addressing the need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Hence, the new policy of emphasizing science and technology is designed to be the strategic basis for longer-range economic development by filling the gap left by the short-term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f North Korea recognizes the global trends

toward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and decides to join the world market, Kim Jong Il's long-term economic strategy must refocus its emphasis on the Information-Technology industry. In this context, North Korea's policy of stressing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of achieving an "economic Leap-Frog" style of development deserves close attention.

Key Words :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ree-First Policies,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Revolutionary Economic Policy, Policy of Giving Priority to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Technology Industry, Leap-Frogging Strategy